

법원, 전공의·의대생이 낸 '증원 취소' 집행정지도 각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세 번째 결정 앞선 재판부 "전공의·의대생은 제3자" 신청 적격 없다 보고 각하 결정 내린 듯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부

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

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및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북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

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 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제3자로 구분해 신청인의 적격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전국 40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3건 중 2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서선욱기자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돈주고 산 아기, 학대·유기 40대녀 항소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기의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4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남편 B(46)씨와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부부는 2020년 1월30일 아기를 낳은 뒤 인계하는 대가로 C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 이후 아기를 인계받아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부부는 아기를 양육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지불하고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을 인계하기로 약속하고 출산 후 실제로 아기를 받아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도 받았다.

부부는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들에게 인터넷으로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면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채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뉴스

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 보복살인' 나주 영산과 행동대원 2심도 무기징역

검찰이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과 행동대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4일 20회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6)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서씨가 살인을 주도하고 살인미수에도 가담했다. 물론 밀항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 오래 전 처벌을 받은 공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씨는 폭력조직 영산과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과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과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과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로도 받았다.

서씨는 당시 신양과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흥기를 준비해 같은 조직원 11명과 범행했다.

서씨를 포함한 영산과 조직원들은 '반대파'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저히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해외 도피를 마치고 입국한 직후 해당 조사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이라고 속였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범행 시점(1994년)을 기준으로 처벌 기간이 지났다고 여긴 것이다. 서씨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 도주해 연장된 공소시효 시점(2011년 6월)도 지났다고 간주한 셈이다.

서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서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 서씨 측 법률대리인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배의 지시에 따라 보복하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중국으로 밀항해 28년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어렵게 살았다. 정신적 고통 속에 살면서 충분한 범행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른 범행에 대한 변명 여지는 없지만 먼저 처벌 받은 공범과의 양형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전두환, 5·18 1주기 앞두고 전남대 추모분위기 통제"

5·18 직후 전남대·중정부·505보안대 참여 협의체 구성

전두환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 직후 유관기관을 모아 대학에 '학생지도' 명목의 협의체를 꾸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대학 측이 5·18 1주기를 앞두고 교내 추모 분위기를 통제할 사실도 확인돼 신군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

4일 5·18기념재단이 전남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남대는 1980년 7월7일 대학 총장실에서 개강 대비 대책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9월1일 개강에 대비해 지도교수제 강화 등 학생지도대책을 수립하는 안건을 다뤘다. 5·18 당시 시위 등에 참가해 피해를 입거나 신군부에 압송돼 석방된 학생들에 대한 위로·위로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지도 공동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내용이 논의됐는데 함께 하는 기관으로 신군부 산하 기관이 포함됐다. 대학 측은 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를 꾸리기로 했으며, 이중 '자문기관협의회' 소속으로 '전교위·도경·CIA·계엄분소·505' 등 5개 기관이 적시됐다. 계엄도경은 전남경찰청, CIA는 중앙정보부, 505는 505보안부대

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에 중앙정보부와 505보안부대, 계엄분소 등 신군부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황은 개강을 앞두고 학내 시위 등에 대비한 것이라고 재단은 의심하고 있다. 교내 추모 분위기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신군부가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진다.

전남대는 5·18 1주기를 앞둔 1981년 5월 6일 긴급학정회의를 열어 추모 분위기 통제를 나눴다. 회의는 5월2일 일부 학생들이 검은 리본을 패용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 열렸다.

총장은 회의 지시사항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검은 리본 패용과 추모회 개최, 추모 수업거부와 추모 단식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생처장은 당부사항으로 '2주간 전교 직원이 노력해 5·18을 무사히 보내자고'하는가 하면, 교무처장도 '사태 재발시 학교자체의 존립조차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외부 일부인사의 무책임한 책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했다. 5·18 1주기를 이틀 앞둔 1981년 5월16일

에는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학생에 대한 격리 지시가 총장 명의의 긴급지시로 내려왔다. '교직원을 나눠 학교 주변을 경계, 검은 리본을 찬 학생들을 단속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동·서문에는 통근차를 배치해 문제 학생이 발견되는 즉시 태워 격리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 집결은 사전에 금지되어야 한다'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보도·통신 통제'도 당부했다.

재단은 이같은 자료로 미뤄 신군부가 전남대와 물질 접촉해 추모 분위기를 꺾고 학내 탄압에 손을 뻗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 1주기 전후 전남대 학생들은 10명 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서명 날인을 받아 학생과 회신을 받아야 했다. 5·18 이후 학생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학내 추모 분위기 탄압에 나섰다"는 직접적인 연결 증거는 없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신군부와 학교 사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모 탄압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슬비기자

여중생 상대 스타킹 신고 성기노출·음란행위...20대 입건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학교 주변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A(20)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지역 내 여중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앞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 활동 중 정보를 입수, 여중생사탐과 긴밀한 협업으로 발생 3일만에 A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뉴스

여수 아파트 옥상서 70대 작업자 추락

4일 오전 8시22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의 4층 규모 아파트 중 옥상에서 작업자 A(71)씨가 추락했다. 이날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방수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기동채재본부